

일주문 앞까지 위락시설-아파트

흔들리는 수행환경권 실태와 대책

조계종총무원이 사찰 수행환경 침해사례 수집에 나서서 등 건축법 8조4항(도시미관, 주변환경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총무원 사회부(부장 성조)는 7일 전국 사찰에 배포한 증보를 통해 "건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찰 인근에 무분별한 건축허가를 남발함으로써 사찰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의 보존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며 피해사례 신고를 16일까지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부는 사례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허가 취소 또는 건축주에게 공사 중지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찰 인근의 건축 및 관광 개발 등으로 환경분쟁을 겪고 있는 사찰은 울주 석남사와 울산 청룡암, 구미 원각사, 대구 선봉사, 문경 봉암사, 합천 해인사 등 10여곳에 이른다. 대부분의 해당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은 수행과 포교는 뒷전으로 밀려놓은 채 거리로 나와 사찰 수행환경 수호에 나서서 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석남사의 경우 일주문 바로 앞에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비구니 특별수행도량이라는 자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전통사찰인 원각사도 인근 아파트 건축공사로 사각이 훼손됨은 물론 석탑 등 성



◇건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찰인근에 무분별하게 건축허가를 남발해 사찰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 훼손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석남사 스님들이 6월22일 공사현장에서 위락단지 건설 반대시위를 하는 모습.

조계종 사찰환경 피해사례 수집 나서 전사법 개정안 9월 국회 상정 추진

보문화재의 파손까지 나타나고 있다. <관련칼럼 6면·속보 23면> 분쟁을 겪고 있는 사찰 인근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개정 이전에 난 곳이다. 개정 이전 건축법 8조4항이 사찰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최

소한의 장치로 작용했으나, 이마저 없어짐으로써 사찰과 건축주·지자체간의 분쟁 발생이 훨씬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업무집행을 우선으로 하는 공직사회의 생리를 무작정 탓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조계종은 건축법 개정으로 따라 없어진 보호장치를 전통사찰 보존법 등에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은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확대 및 사찰 인근에서의 금지 행위 규정에 수행환경 침해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획실은 전사법 개정안을 국회정국회와 3당 불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입법으로 9월 정기국회에 상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법 개정으로 따른 사찰 수행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과 김성재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약속이 있어 전사법의 개정 조계종의 요구대로 이뤄질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조계종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가 된 곳이어서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보다 다수의 국민이 쾌적한 환경으로 일할 수 있는 이익과 사찰이 간직한 전통문화와 수행력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과실이 더욱 크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사찰 수행환경 침해가 심각하고 예측된 상황이었음에도 대응이 늦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석남사 앞 위락단지는 이미 목조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며, 청룡암 바로 옆에 들어설 예정인 폐건축자재 재활용공장 부지도 기초공사를 진행중이다. 건축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묶여있던 각종 건축허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국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개발계획 인지단계에서 총무원에 보고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단 차원의 대책위 구성도 시급하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고신스님(왼쪽)과 원불교 이광정 종법사가 지난 6월16일 열린 종교지도자 오찬간담회에서 만나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재가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원불교 종단협의회 재가입 교계반응

“불교화합차원 환영” “교조 석가모니불이어야”

원불교내에서도 가입 찬반 논란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재가입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종교학자들이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재가입을 바람직하다고 보는 반면 조계종 소속 일부 스님들은 '석가모니불 교조'를 원불교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종교대 정각원장 법산스님(선학과 교수)은 "원불교는 외형적으로 불교이다. 내면으로는 초불교·초대승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협력하고 경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불교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신문 보도 이후 원불교 내에서 종단협의회 가입 논란이 뜨겁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교조를 석가모니부처님으로 하고, 조종을 소대산 대종사로 하지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내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석가모니불 교조' 수용이라는 전제에 대해 원불교 교현에 '법신불 일원상을 중지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원불교가 종단협의회에 가입하려는 이유에 대해 교계 일부에서는 국제활동과 군포교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해 호주에서 열린 세계불교도우의회(WFB) 대회에서 사회자가 원불교 대표를 한국불교 대표로 소개한 데 대해 조계종의 한 스님이 "원불교는 불교와 별개의 단체"라며 이의를 제기한 일이 있었다. 한 교계인사는

"군법사 과경도 의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일부 종단이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가입에 대해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계종총무원인 고신스님의 가입 권유에 대해 "불교가 함께 힘을 합치자는 순수한 뜻이 지 다른 의도는 없다. 그대로 받아들여달라"고 강조했다. 원불교의 '불교성'에 의문을 나타내면서도 '화합'과 불교역량의 강화라는 대의명분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윤원철 서울대학교수(종교학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다종교사회에서 종교간 종파간 화해와 화합 협력의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교조를 석가모니부처님으로 하고, 조종을 소대산 대종사로 하지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내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재가입에 대한 논란은 16일 종단협의회 임시사회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때가 분기점이 될 것이라 전망된다. 조계종 또는 종단협의회와 원불교의 책임있는 인사의 만남도 이따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불교의 '업(業)사상'은 일단 발생한 것은 그 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며, 또한 지금의 현상은 과거의 업이 맺힌 연기의 결과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리 부정적인 역사적 사건일지라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지혜와 용기를 지녀야 한다.

지난 5월18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시민들의 오열속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까마득히 잊은 것 같았다. 지역차별은 같은 민족 사이에서조차 슬픔과 즐거움, 선과 악의 기준을 다르게 한 것이다.

우리가 20세기에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자. 일제식민지화, 6.25전쟁, 군사독재, IMF... 등 민족적 수난의 연속이었다. 이

그 갈등의 고리를 매우지 않는 한 민족단합은 있을 수 없으며 남북통일은 한낱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최근 햇볕정책 아래 우리는 북한에게 즐거하게 민족화합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 후손들에게 그 연기의 결과로 남겨질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본을 방문하여 "20세기에 있었던 일은 모두 이 세기 안에 청산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해야 한다. 일본의 과거 청산은 일본인의 양심의 문제이며 한국 정부는 과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다.

동일은 민족공동체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일 화합, 동서화합, 남북화합... 이들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 삼위일체의 관계에 있다. 동서화합 없이 통일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도약도 생각할 수 없다. 21세기를 화합의 정신으로 열어가자. 우리에게 수 많은 친일파, 적색분자, 독재 동조자, 지역분열주의자가 있다. 이들을 단죄하기보다는 이 불행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불행한 민족구성원이라는 마음으로 합의의 기회를 베풀어 포용하자. 그것이 음의 업을 긍정하는 부처의 자비가 될 것이다.

해방 이후 계속된 한국쪽의 '과거 청산 요구'에 대한 일본정부의 형식적인 사과, 이 지루한 되풀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적으로도 동서화합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독재 시절의 지역 감정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 갈등의 고리를 매우지 않는 한 민족단합은 있을 수 없으며 남북통일은 한낱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최근 햇볕정책 아래 우리는 북한에게 즐거하게 민족화합을 제시하고 있다.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본지 논설위원)

김재경 기자(jgkim@buddhopia.com)

“재적사찰 갖기 지지” 95.3% “일정자격 갖춰야 신도” 78%

조계종 '포교 의식조사' 내용

조계종포교원(원장 정현)이 마련한 포교 및 신도관련법 제·개정안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자칫하면 제도만 있고 실현이 따르지 않는 '죽은 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여론의 호응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한 셈이다.

설문조사의 주요 문항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적사찰갖기 및 신도등록 실시여부 계속 실시하되 방법을 바꿔야 한다 56.3%, 계속 실시 39.0%, 중단 3.9%로 나타났다. ▲신도등록 업무 종단은 신도증 서식만 통일해 보급하고 신도증 발급은 본·말사에서 한다(47.3%), 현행대로 포교원에서 발급한다(25.3%), 교구본사에서 등록을 받고 신도증을 발급한다(25.2%), 잘 모르겠다(2.3%) 등으로 나타나 신도증 발급주체를 포교원에서 본말로 이관(72.5%)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신도 교무공(매년 1만원) 교무공제도를 유지하고 신규 등록시 1회만 납부(41.8%), 교무공제도 유지하고 사찰에서

관리 및 사용(16.6%), 교무공제도 폐지하고 신도증 발급비만 받음(16%), 현행대로 유지(11.9%), 교무공제도 폐지하고 신도증 무료발급(6.5%), 교무공제도 유지하고 종단에서 관리 및 사용(5.8%)

▲신도교육 및 수계 제도와 필요하다(47%), 매우 필요하다(40.2%), 불필요하다(8.6%), 전혀 필요없다(2.2%), 잘 모르겠다(1.9%).

▲신도의 자격 오계수지와 소정의 교육이수 후 신도등록(39%), 오계수지 후 신도등록(21.6%), 본인이 원하면 언제나(21.6%), 소정의 교육이수 후 신도등록(17.5%) 순이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78.2%로 나타났다.

▲포교사고시 응시자격(실제 활동경력, 단체 임원 또는 지도경력 3년 이상) 필요하다(53%), 매우 필요하다(25.9%), 불필요하다(12.1%), 잘 모르겠다(5.4%), 포교사 양성과정의 강화에 대해 78.9%가 찬성했다.

▲신도단체 임원의 수계(보살계) 및 교육의 무화 필요하다(55.1%), 매우 필요하다(34.9%), 불필요하다(4.6%), 종단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는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opia.com)

중앙승가대학교 이전에 대한 학인들의 입장

이에 중앙승가대학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고 시행을 촉구한다.

1. 이사장 스님은 김포혁신 공시비 지급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속이 밝히고, 즉시 이행하라.
2. 이사장 스님은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의 진상을 밝히고 명명하라.
3. 학교소임의 책임이나 낙임한 인사로 실무진들의 임을 분산시켜 문제의 초점을 흐려놓고 있다. 이에 이사장 스님은 학교에 대한 독단적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4. 승가대 이전불사에 비합리적인 관계자들은 승가의 이름으로 작성하라.

그동안 학교와 총무원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 교육불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랐고 또한 불사에 누가 되거나 않을까 하여 최근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자제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돌아가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우리 학인스님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품위산업과 총무원의 공사비 견제차이로 승가대 이전은 지연되고 있으며, 이사장 스님의 낙하산식 인사로 학교에서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 또한 김포혁신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돌리고 있어 우리 학인들은 이사장 스님 이하 김포혁신 실무담당자 스님들의 지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불교의 미래를 봐서 종단의 중진 스님들이 교육불사에 앞장서야 할 일이건만 이것을 빌미삼아 정치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는 스님들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학인들은 승가대 이전불사에 끼여들어 방해하려 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승가대학교 제 19대 총학생회